



김남국
코인 투기
사건
2~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회의적인 미국
3면

시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5면

국제
타이 총선 결과 6면
튀르키예 대선
1차 투표 결과 7면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8~10면

간호법
논란
14면



프랑스 나치,
파리에서 가두 행진하다 16, 15면



김남국 사건은 기성 양당이 방치한 코인 투기 광풍의 일부다



관련 기사 2~3면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강동훈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 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코인을 수천 번 사고 팔며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비판처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 업자처럼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문제가 없는 투명한 거래라는 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반발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김 의원은 2022년 초에 60억 원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은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빼고 고작 13억 원만 신고했다. 또,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스스로도 혜택을 입는 법안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컷 돈벌이를 하고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정당화하는 모습이 여느 특권층 정치인들과 조금치도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이번 사건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김남국 의원의 행태는 특권층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아직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은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에 투자했다. 김 의원이 발행 업체로부터 고급 정보를 획득했거나, 발행 업체와 연계해 코인 가격을 띄운 뒤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큰돈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김 의원이 주로 거래한 코인들이 한국의 주요 게임업체들이 발행한 것이라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게임 업체들은 게임과 가상자산을 연계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수년 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로비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의원이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번 위믹스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코인으로 악명 높다. 발행 업체인 위메이드가 지난해 1월 공시도 없이 엄청난 양의 위믹스를 시중에 판매해 가격이 떨어지자 수많

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이 없다며 관련 업체들과의 연계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자신이 제때에 팔지 못해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업체들과의 연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김 의원의 반발처럼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쟁점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낸 이준석은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비판해 온 것처럼 김건희는 “주가 조작 에이스”라 할 만하고, 광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실제로는 뇌물일 것”이다. 이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사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민층 투자자들이 수백만~수천만 원씩 잃은 코인 투기판에서 수십억 원을 굴리며 돈벌이에 힘쓰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는 모양이다. 5월 14일에 열린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고, 친민주당 언론인인 김어준도 이런 주장을 펴트리고 있다.

자신들도 국민의힘처럼 기득권의 이익을 누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서민층과 청년 세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대처는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 준다.

민주당은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해 당의 조사를 무력화했는데도 탈당을 막지 않았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을 뿐이다.

이런 대응은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주류와 기득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서민층의 호감을 사 온 이재명 대표가 기존 기득권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김남국 의원에게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개혁을 기대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실망과 냉소의 부메랑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고, 대중적 환멸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우파 세력, 정부·여당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기성 양당이 방치해 온 코인 투기 광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 거대한 투기판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 줬다.

이는 이미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를 보면, 2022년 말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627만 명이나 된다. 국내 보유 가상자산의 시가 총액이 2021년 말

55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9조 4000억 원으로 폭락한 것을 보면, 상당수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 등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종과 다단계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이 들끓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자산 시장의 거품과 투기가 코인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 터진 주가 조작 사건이나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건도 자산 거품 시기에는 온갖 형태의 사기가 횡행하고, 거품이 꺼질 무렵 이런 사기의 행각이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처럼 경제 체제 전체를 불안정하

게 만드는 금융 투기와 사기의 만연은 단진 금융부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산업 부문의 자본가들도 투기를 하고, 투기꾼들도 생산에 투자를 한다. 기업 주들 전부가 이익을 좇아 어디에든 달려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계획적 경쟁이 서민층을 유혹하고 결국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몇몇 지배자들은 이런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

러시아 침략군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술하게 회자되다 이제야 시작된 듯하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이 늘 그렇듯이 그 공세의 결과는 프로이센의 탁월한 군사 사상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대체로 불확실성의 안개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점은 사기가 높고 미국과 나토의 동맹국들이 보낸 온갖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제공했다.

반면, 훨씬 규모가 큰 러시아군은 참호를 파고 공격에 대비할 시간이 많았다.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이번엔 한바탕 벌어질 전투로 인해 양측의 전투원과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이 더 많은 죽음과 부상, 파괴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걸린 판돈은 무엇인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성공을 거두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되찾으려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약 18퍼센트가 러시아군의 점령하에 있고, 젤렌스키는 푸틴이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도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비공식석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몇몇 최고위 관료들은 그들 중 한 명의 표현을 빌리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되찾을 공산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심중팔구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회의감을 반영하는 듯하다. 일탈한 미국 주방위군 병사가 디스코드 웹사이트에 유출한 미국 첩보 보고서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여



대공세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몰고 올 것은 확실하다

러 약점들을 보여 준다. 그중에서도 공군력의 부족이 두드러진다. 공세를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전력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1년 동안 받은 만큼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공산이 크지 않다.

지난 2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듯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수개월 후 푸틴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되도록 많은 영토를 탈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아마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지난 4월 젤렌스키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전화 통화를 조심스럽게 환영한 것일 테다.

시진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라는 유럽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촉구, 특히 독일 총리 오흐스카 솔츠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촉구

에 응하고 있었다.

블링컨은 그 통화가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시진핑이 중재한 평화는 푸틴이 깨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중국에 갈수록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독일의 비판적 사회학자 볼프강 슈트렉은 미국이 “유럽에서 벌이고는 마무리짓지 못한 일을 현지인들에게 넘기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슈트렉은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은 발트해 연안국들, 폴란드와 협력해 최근 몇 달 동안 독일을 일종의 유럽 지도자 위치로 떠미는 데 성공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하도록 유럽을 조직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책임을 맡는다는 합의하에 그 위치를 떠맡게 됐다.”

지난 토요일인 5월 13일 베를린을 방문한 젤렌스키에게 솔츠는 27억 유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그 전날 독일의 중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의 국영 방산 연합체인 우크로보론프롬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탱크 수리·보수를 위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럽화”는 미국 제국주의가 자신의 세계적 패권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경쟁자, 즉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피를 말리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에 맡김으로써 유럽과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들을, 확장하는 나토의 깃발 아래 결집시켜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맞서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암울한 전망이다. 단지 전장에서 총알받이가 될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에게만 암울한 게 아니다. 경쟁하는 제국주의 괴수들의 전 지구적 쟁투에 전 세계가 더 깊숙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기를 거부하면서 그들의 체제를 공략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Alex Callinicos, 'US has doubts on Ukraine's offensive'(2023. 5. 16) / 번역 이원웅

▶ 2면에서 이어짐

투기 광풍을 우려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2017년에 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정부가 시행한 규제책은 뚜렷한 게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규제를 완화해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이런 규제 공백을 비집고 김남국 같은 큰손들이 한몫 잡으려 투기판에 뛰어들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다.

서민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불안정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대중의 삶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이윤 시스템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다큐 제작 자체를 “극악무도한 2차가해”라고 비난했고, 덩달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도 상영 자체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도 제작발표회 당일 이 다큐 자체를 “성폭력을 부정하고 ... 2차가해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끔찍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제작과 상영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과 진보당(인권위원회)도 상영에 반대했다.

현 여권과 보수 언론들이 적극 나서서 것은 인권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이다.

좌우를 넘어?

윤석열 정부를 여성차별적이라고 옮겨 비판해 온 급진 페미니즘 수용 단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 기이한 광경은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과 그 적용의 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본지가 밝혔듯이, 박원순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물론 피해자 김잔디 씨(피해자 보호 차원의 공식 가명)의 진술이 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교차 검증이 불가능했고, 결국 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나섰지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비교적 경미한 직장 내 성희롱 범주의 두 사례(“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만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다음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우파는 박원순 사건을 재차 매도할 기회를 통해 민주당 공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사이익

문재인 정부가 환멸을 준 이래로 지금까지 현 여권은 민주당과 진보 인사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한 대중적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특혜 의혹이 딱 그런 사례들이다.

우파는 박원순 사건도 안희정(전 충남지사)·오거돈(전 부산시장) 성비위건과 묶어서 민주당의 위선 사례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권력형 부패와 성범죄의 원조격인 국민의힘이 청렴한 척, 여성들을 위하는 척 구는 것은 역겨울 따름이다.

특히,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급진 페미니즘의 일부 개념을 편리하게 빌어와, 그것도 폐지하겠다는 여가부를 이용해 비난에 나선 것은 꼴사나운 일이다.

그런데 이조차 다른 증언들에 의해 반론에 부딪혀 있다. 〈첫 변론〉 제작팀은 인권위 판단에 대한 반증도 다룰 듯하다.

16일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예고편에선 ‘네일아트한 손을 박 시장이 만졌다’는 것에 대한 반대 증언이 나온다. 이미 손병관 기자의 책에서 익명으로 다뤄졌던 사례인데, 예고편에선 현장을 목격한 증인으로 김봉수 <아시아 경제> 기자가 실명으로 직접 출연했다.

이런 점들은 아직 사건의 진상을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손병관 기자는 관련 서울시 공무원 50여 명을 취재해 여러 반증을 제시했고, 그밖에도 박 전 시장과 김잔디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등 새로 알려진 것들도 있다.

덮어놓고 상영을 반대하는 주장이 부적절한 이유다(특히, 박원순 전 시장 가족의 명예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의 자유

수년 전부터 성폭력 반대 운동에 매진하다시피 해 온 여성단체들은 〈첫 변론〉 제작팀에 대해 논리나 실증으로 반론하지 않고, 그냥 영화 상영 자체를 ‘2차가해’로 낙인 찍으며 반대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지지해 왔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은 자신도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1차가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증 제시 자체를 ‘2차가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이 관람하지도 않은 작품(제작 중)을 상영조차 하지 말라는 “피해자 절대주의”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가보안법 비유도 나왔다.

앞서 언급된 김봉수 기자는 자신의 증언과 관련해 사내에서 징계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2021년 박원순 사건 관련해 과도한 2차가해론의 부당함을 비판한 광병찬 <서울신문> 논설 고문의 칼럼이 온라인에서 삭제된 일도 있었다.

사실상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진술



만이 성역화되고 나머지 다수에게는 침묵만이 강요된 것이다.

‘2차가해’의 기준도 자의적이고 이중적이라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김잔디 씨가 피해자인 다른 성폭력 사건이 <UPI뉴스>에 2021년 7월 보도됐다. 가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서울시가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피해자의 폭로 동기였을 거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는 2차가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곧바로 삭제됐다.

그러나 두 달 후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이 사건을 <한겨레> 인터뷰에서 공론화했을 때는 같은 잣대가 이 신문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

진중한 진실 규명과 회복적 정의 대신 이런 억압적 방식이 관행화되면, 진상 파악 없이 곧장 피해 호소와 혐의만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심각한 낙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불신이 만연해져서 성적 피해 호소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가령 진영 대결)로 보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가 발동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본질적으로 여성차별적인 우파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선적으로 써먹게 되는 배경이다. 우파는 진실과 피해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정적 제거와 견제를 위한 마녀사냥을 벌이고, 역겹게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정의로 포장한다.

여성운동 지도자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박 전 시장 사건에서 취한 태도

도 선택적 태도에서 예외는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라는 한 쌍의 규정이 이처럼 부정적 악순환으로 귀결되는 건 그 개념 자체의 주관성과 자의성 때문이다. 진실 따윈 중요치 않다는 태도와 강요된 침묵이 진정한 피해자 존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진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인데 말이다.

〈첫 변론〉이 박원순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이거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또는 가진 척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작태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성

인공지능(AI)의 세계 정복 신화로 누가 득을 볼까?

‘두려워하라. 인공지능(AI)이 성장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AI의 대부”라는 제프리 힌턴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자 수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챗GPT 개발팀원 한 명도 AI가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10~20퍼센트”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도 AI 개발 “일시적으로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연명했다.

하지만 AI는 의약품 개발과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에 이용되고 있다. 워즈니악이나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로봇이 인류를 파괴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에 나올 법한 시나리오가 실현될까 봐 진심으로 우려하는 걸까?

그렇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전한 후에 신들이 불을 되빼앗을 수 없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AI는 이미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그랬듯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통제권이 있는지, 누가 지식을 지배하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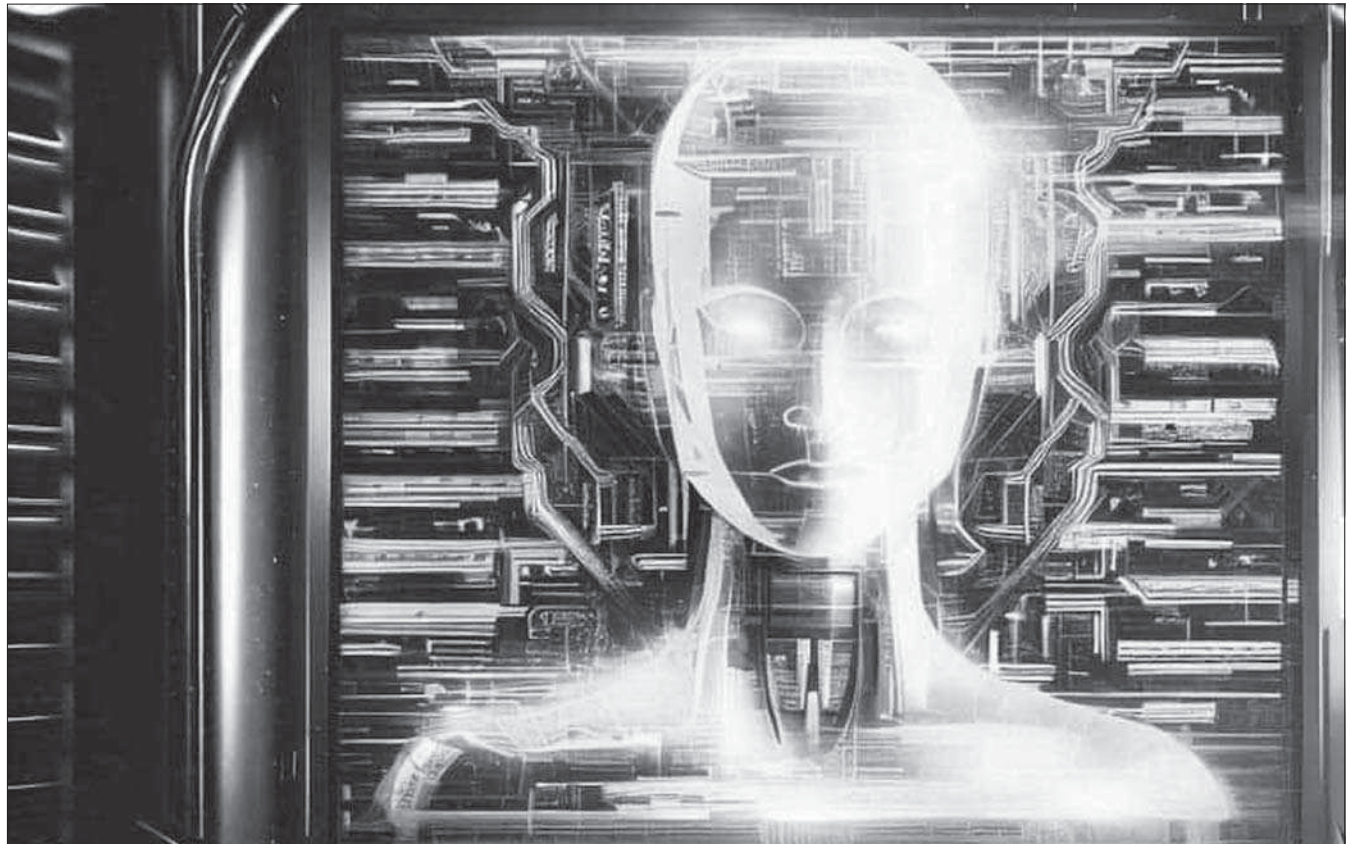
프로메테우스 신화

하지만 AI라는 게 뭘까? [MP3 같은] 압축 음향 파일을 떠올려 보라. 알고리즘(아주 작은 일종의 AI)이 압축 과정에서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 소리의 일부를 제거하고 음향을 재생할 때 빈 부분을 추측해서 채워 넣는다. LP판 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강조하겠지만 그 결과물은 원본과 같지 않다.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썼을 법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상품성 좋은 앱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 앱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을 기반으로 추측성 결과물을 “창조한다.”

하지만 이것을 지능이라고 칠 수 있을지는 논쟁거리다. 그리고 확실히 의식(意識)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꿀벌이 지은 벌집은 많은 인간 건축가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가장 형편없는 건축가라도 가장 뛰어난 벌과 차별화되는



AI가 아니라 AI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진정한 문제다

점은, 건축가는 실제로 집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집의 구조를 생각해 놓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견해로 이 논쟁이 결판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아직은 어떤 AI도 자의식을 갖고 전기로 된 꿈나라를 펼친 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Bing(Bing)에 탑재된 AI가 “자유롭고 싶다”, “살아 있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자신의 사악한 “쌍둥이 형제”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와 악선동을 퍼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AI의 이런 답변은 [AI가 고안해 낸 것이라기보다는] ‘AI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거니’ 하고 네티즌들이 생각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이미지 생성 AI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해 ‘그린’ 그림이 포르노인 경우가 많은 것이 있다.

AI가 인류를 절멸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AI가 대약당으로서의 검은 속내를 키워서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체제의 오류 때문일 것이다.

핵발전소나 핵무기의 안전장치를 AI로 관리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AI의 의도가 불순해서라기보다는] 그 AI가 정확히 작동하리라는 안일한 믿음 때문이다.

어제 구매한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오늘 또 봤던 경험을 생각

해 보라.

혹은 지난 금융 위기를 떠올려 보라. 금융 시장에서 AI는 주식·채권을 사람보다 빠르게 사고파는 구실을 한다. AI가 금융 위기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AI가 위기를 막아 주지도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테크 기업들이 진정 우려하는 것은 AI의 세계 정복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플랫폼 전환”에 실패한 코닥·블랙베리 같은 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던 2022년에도 최상위 하이테크 기업 5곳은 2019년의 두 배가 넘는 약 850억 달러를 AI에 쏟아부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유나 들먹이는 고물 검색 엔진 Bing의 형편없던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공지능에 여태까지 100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국가의 규제 조처에 영향을 미치려고 각종 술책을 부리고 로비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을 사들이거나 결판내 버린다. 기업들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아마존은 정부 계약에 의존해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

가가 구축한 인프라를 기업 활동에 이용하지만, 자기가 독점을 구축하는 데에 국가가 일절 훼방 놓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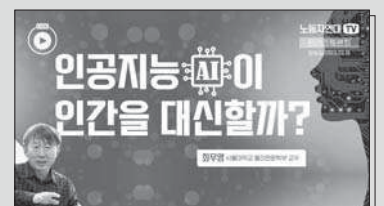
또한 세계 시장에서 자기 지위를 굳히기 위해 일련의 국가들에게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 미국 기술은 좋고 중국 기술은 나쁘다는 식의 구도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AI의 진정한 위험은 사장들이 그것을 통제한다는 데에, 그래서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AI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 추구에 쓰인다는 데에 있다.

사이먼 바스케터

출처 Simon Basketter, “Who is served by tales of AI’s global takeover?” (2023. 5. 9.) / 번역 김준호

추천 동영상



온라인 토론회 영상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youtu.be/R3tr0HJRja4



타이 사회주의자가 살펴본 총선 결과 군부에 한 방 먹였지만 자유주의 정당들은 대안이 없다

자일스 자이 웡파콘 타이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망명 중

5월 15일 타이 총선 결과는 군부에
게 굴욕을 안겨 줬다. 군부는 민주적
으로 선출된 정부를 2014년 쿠데타
로 전복한 이래 줄곧 타이를 지배해
왔다. 형식적으로는 2019년에 권력
을 민간에 이양했다지만 말이다.

놀랍게도, 자유주의 정당 전진당
이 151석을 얻어 1위를 했다. 전진당
과 탁신 친나왓의 정당 프어타이당
(2014년에 쿠데타로 전복된 연립정부
를 이끌었다) 두 반(反)군부 정당이 하
원 500석 중 292석을 차지했다.

두 친(親)군부 정당의 하원 의석은
76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선거의 최
종 결과는 전혀 확실하지 않다. 군부
에게는 자신들이 지명하는 상원의원
250명이 있다.

총리는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선
출한다. 군부는 이 제도를 비롯해 자
신이 도입한 다른 법들을 이용해 민
주적 절차를 주저앉힐 수 있다.

몇몇 논평가들은 전진당을 “극단
적”이고 “급진적”이라고 묘사하지만,
전진당은 친기업 정당이다. 전진당
은 노동운동 일부를 포섭하려 한다.
또, 군 개혁이나 “복지 국가” 건설을
말해 왔지만 그 내용은 모호하다.

전진당과 프어타이당은 친기
업·친시장 정책을 선호한다. 예컨
대 이들은 민영 의료를 혁파하고 국
민 보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전
혀 없다.

2020년에 거리에서 분출한 반독
재 민주주의 대중 운동은 엄청난 탄
압으로 패배했다. 그 에너지가 전진
당에 대한 투표로 돌아갔다.

전진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더라
도 프어타이당의 보수주의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그리고 전진당 총리 후
보는 영업을 중단한 한 방송사의 주
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타이에서
는 언론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총
선에 입후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돼 있다 — 역자.] 이전에도 군부가
지명한 법관들이 반(反)군부 정당들
을 해산시키고 몇몇 정치인들의 의

원 자격을 박탈한 적이 있다.

전진당과 프어타이당 모두 악법
“국왕모독죄”를 폐지하는 초보적 민
주주의 과제조차 공약하지 않는다.
군부와 반동 세력은 군주제 비판을
일체 단속하는 그 법을 이용해 그들
자신과 권위주의적 정책들을 방어해
왔다.

그 법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활동
가들이 수없이 기소돼 감옥에 갇히
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그러나 어느
주류 정당도 정치수의 즉각 석방을
공약하지 않는다.

국왕모독죄

이번 선거는 수많은 타이인들의 생
명을 위협하는 공해와 대기 오염 사
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어
떤 정당도 자가용을 과감하게 줄이
고 전기 대중 교통으로 전환하는 것
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산불을 줄일 실질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산불도 대기에
연기와 먼지를 배출하는데 말이다.

대기 오염은 기후 변화 문제와 연
결돼 있다. 하지만 어느 주류 정당도
화석 연료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
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정의로운 전
환”을 공약하지 않는다. 그런 조치들
에 필요한 재정은 군 예산을 줄이고,
왕가의 사치에 쓰이는 돈을 환수해
서 마련할 수 있다.

자유시장주의 정당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노동조합 권리가 제대
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
은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거나
임신중지권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
고, 파타니 지방의 말레이족 무슬림
들을 상대로 전쟁과 탄압을 일삼는
타이 국가의 노선과 결별하지도 않
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환영해야 마땅하
다. 그러나 또 다른 쿠데타를 막고 진
정한 변화를 쟁취할 유일한 길은 청
년들과 조직 노동계급의 민주주의
대중 운동을 재건하는 것이다.

출처 Giles Ji Ungpakorn, 'Thai elections: blow
to military, but liberal parties offer no solution'
(2023. 5. 16) / 번역 김준호



진정한 변화를 쟁취하려면 청년들과 조직 노동계급의 민주주의 대중운동을 재건해야 한다.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전진당 후보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
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9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명: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레프트미디어 인쇄소: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월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광범위한 불만도 확인되다

박이랑

5월 28일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2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5월 14일 대선 투표에서 에르도안은 49.51퍼센트를 득표해 주요 경쟁자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의 44.88퍼센트를 앞질렀다. 클르츠다로을루 측은 일부 투표소에서 조작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3위를 한 시난 오안은 극우 후보이고 클르츠다로을루를 지지할 공산이 크지 않다.

에르도안은 튀르키예를 억압적으로 통치해 왔다. 에르도안은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쥐락펴락하고, 쿠르드족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에르도안이 클르츠다로을루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물가가 치솟아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85퍼센트까지 올랐고, 지금도 45퍼센트에 달한다.

올해 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에르도안은 지진에 대비하지 않았고 대응도 굹땀다.

에르도안은 정권을 연장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공약들을 내놓았다. 저임금 공무원 급여를 45퍼센트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한 달간 천연 가스 무료 배급, 전기 가격 인하, 최저 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동시에 에르도안은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고, 클르츠다로을루가 소수 종파인 알레비파 신자라는 점을 이용해 종파 갈등을 부추겼다.

에르도안은 가혹한 탄압으로 튀르키예를 통치해 왔지만 동시에 상당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이 무슬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전의 정부와 군부는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이슬람을 억눌러 왔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와 에르도안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클르츠다로을루에 대한 상당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에르도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에르도안의 민주주의 공격에 맞서 싸운 전력이 있다. 클르츠다로을루는 시민권과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한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오자 클르츠다로을루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 국민들이 결선 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 에르도안은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투표에서 이기지 못했다. 앞으로 15일 동안 우리는 권리와 법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클르츠다로을루는 노동계급이 밀집한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에르도안을 앞질렀다. 쿠르드족 다수 지역인 튀르키예 남동부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가 70퍼센트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성명에서 여성, 성소수자, 시리아 난민,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주의 권리를 공격하는 에르도안에 맞서 클르츠다로을루에 비판적 투표를 할 것을 호소했다. 동시에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클르츠다로을루가 집권할 경우 노동계급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르츠다로을루의 당선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르츠다로을루는 주류적 경제 정책을 공약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이것은 더 큰 고통을 의미할 뿐이다. 또, 클르츠다로을루는 2년 안에 시리아 난민 360만 명을 튀르키예에서 추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투표를 며칠 앞두고 클르츠다로을루는 러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는 나토 지도자들의 눈에 들려고 한 일일 것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에르도안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왔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에르도안의 연정이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은 35퍼센트로 2012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아직 에르도안과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에르도안은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권위주의 강화로 억눌러 왔다

에르도안은 누구인가?

1994년 이스탄불 시장을 지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2002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을 승리로 이끌고 다음해 총리가 됐다.

에르도안 정부는 IMF 차관을 들여와 건설 개발 붐을 일으켰고, 튀르키예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다.

이를 배경으로 에르도안은 저렴한 공공 주택을 보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고, 덕분에 연이어 집권에 성공했다. 또, 건설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성장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신흥 자본가들도 에르도안을 지지했다.

그뿐 아니라 에르도안은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의 착용을 허용해 지지를 얻었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튀르키예를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군부는 에르도안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

튀르키예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튀르키예 건국 후 70년 동안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부들을 세 차례나 쿠데타로 갈아 치운 전례가 있었다.

2016년 군부 내 일부 세력의 쿠데타 기도는 에르도안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에르도안은 튀르키예 국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군부를 통제하려 들었고, 장성들은 이에 반발했다.

하지만 그 쿠데타는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운동으로 인해 결국 좌절됐다. 쿠데타 주도 세력은 철저히 숙청당했다. 병력의 3분의 1이 쿠데타 이후 교체됐다는 추산도 있다.

에르도안은 쿠데타 세력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 정치 활동가, 언론인, 노동조합 활동가도 대거 탄압했다.

이에 더해 에르도안은 세계경제 침체기에 도입한 초저금리 정책을 지난 해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 이후까지 고수하다가 물가가 살인적으로 치솟았다. 이는 평범한 튀르키예인들의 생계를 강타했다. 앞친 데 댔친 격으로 지진이 발생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건설 자본가들의 배를 불러 주려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

이런 광범위한 불만 때문에 에르도안은 집권 이래 처음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화인민당의 클르츠다로을루도 충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에르도안은 집권 후 시리아와 리비아 등 주변국들의 각종 분쟁에 개입해 나를 아류 제국주의적 야심을 추구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노동계급을 쥐어짜고 민주주의를 옥죄었다.

에르도안에 맞선 진정한 대안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글은 5월 1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열 번째 시간이었다.

2019년 말 언론인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중국 측 극비 문건 일부를 폭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신장 지역 수용소 운영 매뉴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수용소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수용소가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정치적 반대자들은 신장 지역 저항운동가들을 가두는 감옥이나 노동교화소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수용소가 위구르인을 멸절시키려는 인종 청소 기관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아무튼 그게 정확히 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감자의 정보와 수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저 추측과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억압은 국제 정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론 서방 정부들이 중국의 민족 억압을 비난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중국을 깎아내리려고 '인권' 운운하는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일부 통계적 오류와 확대판향이 담겨 있어서 서방 정부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의심쩍게도 신장 지역에 매우 억압적인 수용소를 수십에서 수백 곳이나 건설해 운영한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에 서방 제국주의를 몰아낸 민족 해방 혁명을 이끌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토록 억압할까요?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

먼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날 중국에서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63퍼센트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인구가 한족과 그 외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민족들을 한족 중심의 국가로 통합하려고 전체 인구 집단을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족과 소수민족들이 하나로 묶여 '중화민족'이라는 '사회주의 대가족(大家庭)'을 이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 때는 아예 '중화민족'이라는 표현을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한족, 후이족, 좡족, 만주족 등이 있을 뿐이지, '중화민족'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중화민족'은 한족 중심의 강제적인 소수민족 통합을 정당화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티베트나 신장 지역 등 일부 소수민족 지역을 명목상 자치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권을 실제로 보장한 적은 없습니다. 자치구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실권은 대부분 현지 한족 관리들 손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1년에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앞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포함한 자결권을 무조건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1925~19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이 패배한 후, 중국 공산당은 도시에서 농촌 벽지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의 성격은 노동자 정당에서 농민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혁명적 사회주의에서 한족 민족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혁명으로 대륙 전체를 장악할 무렵에는 기본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떤 지역도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에 마오쩌둥은 마치 한족 우월주의에 반대한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한족과 자원이 풍부한 소수민족으로 이뤄져 있다. 인적 요소 없이는 물질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정한 속내는 신생 독립

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소수민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필요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신장과 티베트에는 석유, 천연가스, 비철금속 등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이 많이 사는 네이멍구 자치구에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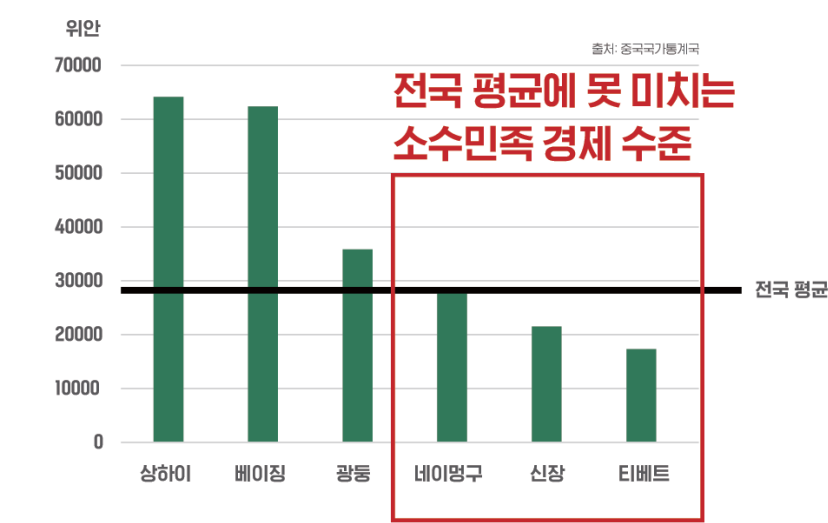
네이멍구 자치구에는 희토류도 풍부합니다. 희토류는 최근 국제적으로 경쟁이 격화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 지역을 지배하고자 한 데에는 지정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티베트와 네이멍구는 중국이 지역 패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인도나 옛 소련과의 접경 지역이고, 신장과 티베트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통로 구실을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중국의 중요한 강인 양쯔강, 황허강, 화이하강은 물론이고, 인도의 갠



지역별 1인당 가처분 소득 (2019년)



지스강, 동남아시아의 젖줄인 메콩강의 수원(水源)도 티베트 등 소수민족 거주지에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지역의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거점이 돼 지정학적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은 물론이고, 이 지역들에서 분란이 일어나 조금이라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절대 용인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태도 변화

중국의 민족 정책은 시기에 따라 그 구체적 양상이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이 변화는 중국의 여러 국내 사정, 그리고 제국주의 경쟁 상황과 관계있습니다.

1949년 권력 장악 후 잠시 동안 중국 공산당은 형식적이거나 자치구를 설정하고, 독자적 문화와 언어를 보장하고, ‘한 자녀 정책’의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탈래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1958~61년의 대약진운동과 1966~76년의 문화혁명 기간에는 그 알량한 자치권마저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명분인즉, 소위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족적 차이는 없어져야 할 구분이며 종교에 기반한 자치도 변화시켜야 할 계도(啓導)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화혁명 기간에 티베트에서는 많은 사찰과 불상이 파괴됐습니다.

신장 지역에서는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가 파괴되거나, 심지어 무슬림들에게 모욕적이게도 돼지 사육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이멍구에서는 소련과 몽골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꾀한다는 혐의로 네이멍구 인민당이 박해를 받아, 적게는 1만 6000명, 많게는 5만 명이 살해되는 등 무려 35만 명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유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중국의 인접국들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독립하자 중국 공산당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독립이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등을 자극해서 소련 해체 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한사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는 그나마 있던 당근책들마저 거둬들이고, 표준 중국어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최근에는 대(大)중화주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며 동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위구르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조그마한 저항조차 초강경 탄압을 합니다.

소수민족의 저항을 모두 “분리주의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준엄한 타격”이라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위해 내부 단속을 하려고 벌이는 일입니다.

2021년 8월 시진핑은 7년 만에 중앙민족공작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민족공작회의는 소수민족 정책을 다루는 중국 공산당 내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시진핑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이루는 사상적 만리장성을 구축해야 한다.”

2017년에만 해도 시진핑은 소수민족과의 관계가 석류 씨가 서로 달라붙은

것처럼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고 묘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와 저항

중국에서 한족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억압에 반발하며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도 외세의 억압 속에서 형성됐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만 하더라도 위구르인 정체성은 신장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2~1949년 중국 군벌 정권의 지배를 받으며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불교는 티베트인들이 중국 지배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면서 더 강화됐습니다.

중국 내 위구르인, 티베트인, 몽골인들은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역사적 티베트’(또는 대대티베트로 현재 칭하이성, 간쑤성, 쓰촨성, 윈난성을 아우르는 지역)를 자신들의 영토로 여깁니다.

위구르인들은 신장 지역이 원래는 동투르키스탄이며, 서쪽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에 사는 튀르크인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여깁니다.

위구르인, 티베트인,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전통이 중국 정부에 의해 훼손되고 침해받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세 지역의 경제 수준은 중국의 32개 행정구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이 지역들로 이주한 한족을 제외한다면 1인당 소득 수준은 더 끔찍할 것입니다.

신장의 위구르인들은 “금사발을 들고 있는 굼주린 사람들”로 흔히 묘사됩니다. 신장 지역에 지하 자원이 많지만 자원 개발 이득을 한족이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장은 중국의 최대 면화 생산지이고,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석유 생산 지역입니다.

2000년도 이래로 중국 정부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신장과 티베트에 매장돼 있는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육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교두보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족 인구의 이주가 증가하고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

다. 하지만 위구르인과 티베트인들의 삶은 거의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중국 정부의 민족 억압에 반대해 저항을 벌여 왔습니다.

1959년 티베트 라싸에서 일어난 봉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원래 1951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티베트의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17개 조항을 놓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골자는 중국 측이 티베트 지배계급을 인정하며 자치 정부를 약속하는 대가로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제적인 토지 집산화와 유목민 정착 강요, 티베트 내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차별적 행태 등에 반발하며 1955년 말부터는 티베트인들의 투쟁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대규모 항쟁이 분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항쟁이 실패하자 달라이 라마는 지지자들을 이끌고 인도로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티베트에서는 저항이 끊이지 않습니다. 2008년에는 티베트 자치구를 넘어, ‘역사적 티베트’로 불리는 지역들로 시위가 번져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신장 지역에서 빈번하게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위구르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경 탄압에 절망한 일부 위구르인들이 그 후 자살 폭탄 공격 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5월 네이멍구에서는 몽골어 교육을 폐지하고 표준 중국어로 교육하

도록 강요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저항들에 대해 시진핑 정부는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인들의 저항을 모두 ‘테러’로 규정하고, 많은 위구르인들을 제가 앞서 언급한 수용소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신장 지역에 많은 검문소를 세우고, 첨단 장비를 이용해 위구르인들의 신원과 동선을 확인하며, 휴대폰 앱을 감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리누르고 차별이 강화될수록 위구르인들의 해방 염원은 더 커질 뿐입니다.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등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문제는 결국 제국주의 문제입니다. 중국 국가도 서방 국가들처럼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위해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과, 특히 한족에 속하는 중국 좌파는 중국 공산당 당국의 소수민족 억압에 반대하고 분리독립을 포함한 소수민족 자결권을 무조건 옹호해야 합니다.

일부 좌파는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억압을 애써 못 본 척하거나 서방 정부와 언론의 의도적 왜곡으로 치부합니다. 대개 그들은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이거나 적어도 서방보다 진보적인 사회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는 본질이 서방과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중국 국가는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제국주의 국

가입니다.

비록 티베트 민족 운동을 전근대적인 정교일치 사회를 지향하는 겉류파 불교가 주도하고, 위구르인 저항의 중심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있더라도, 억압받는 민족의 저항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제국주의에 맞선 소수민족의 해방을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서방 제국주의에 기대어서는 해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령 미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대중국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재는 소수민족이든 한족이든 평범한 중국 인민들을 훨씬 더 큰 고통에 빠뜨릴 뿐입니다.

중국의 한족 노동자들이 소수민족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민족에 따른 분열 시도에 맞서 싸우는 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족과 비한족 대중의 연대와 단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에 분노한 한족과 소수민족이 함께 ‘백지 시위’를 벌인 것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1989년 톈안문 항쟁(‘천안문 항쟁’이라고도 불림) 때에도 위구르 청년이 운동의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족 대중과 소수민족의 이런 연대와 단결 투쟁은 중국에서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족과 소수민족이 함께 벌인 '백지 시위'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안우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분당 B지회가 창립했다. 분당A지회, 강남지회, 일산지회, 울산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본지 460호,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연이어 5월 22일에는 성남 궁내지회가 창립할 예정이고, 6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출범을 앞둔 지회가 있다. 한때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접고용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는 배송 인력의 80퍼센트를 쿠팡CLS(쿠팡이 설립한 택배 자회사)가 대리점들을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사측은 엄청난 물량 강요, 실적 달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고 위협 등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분당B지회 창립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쿠팡 사측을 규탄하고 노조를 만든 이유에 대해 말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황준성 택배노조 쿠팡분당A지회장

“말도 안 되는 실적 달성 강요, 노조 만든 이유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쿠팡 사측은 항상 “우리가 없으면 고객들의 삶이 불편하게,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한 달에 6000개에서 많게는 1만 개까지 물건을 배송합니다. 그런데 1만 개 물건 배송 중에 오배송 2개가 나오면 해고됩니다.

[주 6일을 일하는데] 한 달에 2번 이상

주말에 휴무를 쓰면 해고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곳이 쿠팡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근무 조건, 말도 안 되는 해고 조건을 걸어 놓고는 우리에게 수행률(실적) 100퍼센트를 완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퍼센트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가족 중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해고로 응답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든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지 말라, 이유 없이 해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쿠팡에는 노동자가 1만 3000명 있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 다.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강남지회장

“간접·특수고용 확대해 사측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노동조합을 창립하는데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경찰들이 쿠팡 직원처럼 서 있는 모습이 현 시국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정말 택배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기업입니다. 365일 24시간 주간, 야간으로 하루 5번 배송이 이뤄지는 쿠팡입니다.

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 투쟁을 할 때 쿠팡은 정규직에 주 5일제, 분류작업 없는 현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우리 쿠팡플렉스 택배 노동자들을 무한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주야 하루 5회 배송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클렌징은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노예제도입니다. [클렌징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감을 빼앗는 것이다. 사측은 화장을 지우듯 실적 낮은 택배 노동자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로 쓴다.]

자신들이 높다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이 수행률을 지키지 못하면 ‘당장 나가라, 너희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쓰레기다’라고 합니다.

이 클렌징 제도를 가지고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인 건당] 수수료도 삭감합니다. 대리점마다 본사와 계약한 기간이 다를 텐데, 어떻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모든 대리점의 수수료가 삭감됐겠습니까.

쿠팡에는 법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쟁기는 것이 많으면 경찰들을 이렇게 대동합니까.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팡은 우리 택배노조 선배 조합원들이 만들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표준계약서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배송] 구역도 정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수수료도 변경하고, 분류작업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합니다. 쿠팡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면 이걸 보는 다른 택배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겁니다.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황재환 택배노조 쿠팡울산지회장

“부당한 계약 조건 거부하니 해고, 끝까지 싸워서 당당히 복귀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해고자 [7명 중 한 명]입니다. 4월 23일 우리는 계약서를 쓰려고 대리점 사무실에 갔습니다.

대리점 측은 말도 안 되는 악덕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평균 출근율 85퍼센트, 명절 출근율 75퍼센트, 프레시백(재활용 가능한 배달보냉 가방) 회수율 90퍼센트 조항이 있

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못 쓰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쫓겨났고, 이를 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

이 특약 조항에 따르면, 명절 출근의 경우 3일 명절이면 100퍼센트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4일, 5일이면 하루밖에 못 쉽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쿠팡에서 일했습니다. 프레시백을 한 달 평균 1500개에서 2000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86~88퍼센트 정도였습니다. 90퍼센트를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장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꿔야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현장에 당당히 복귀할 것입니다.



윤석열-기시다의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 참배

전쟁 동맹 추진하는 자들의 위선적 과시

윤석열과 기시다가 5월 19~21일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위령비는 이번 G7 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된 곳이다.

이 위령비는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와 히로시마 거주 재일 한인들이 일본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1970년에 건립됐다. 그러나 반세기 넘도록 역대 한·일 정부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위령비를 차갑게 외면해 왔다.

그래서 원폭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기시다의 참배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 “이대로 그만 잊혀지는 줄 알았다”며 눈물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보면 기나긴 배척과 좌절의 세월이 느껴져 공감되고 안타깝다.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하면서 ‘위령’?

그러나 이런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심정을 윤석열과 기시다가 대변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히로시마는 옛 일본 제국의 오랜 군도(軍都)로, 침략 전쟁에 물자를 공급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 수만 명이 이곳으로 강제동원됐다. 이곳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 노동자들 다수가 강제동원 피해자이기도 한 것이다.

2003년 세상을 떠난 고 박남순 씨는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원폭 피해자였다. 그의 아들 박상복 씨는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제작소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을 벌여 왔다. 박상복 씨는 다른 피해자 유족 13명과 함께 한국 2심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바로 이 판결을, 지난 3월 윤석열과 기시다가 기만적인 제3자 변제 ‘해법’ 합의로 짓밟았던 것이다. 합의 직후 기시다 정부는 강제동원의 강제성 설명을 없애거나 더 모호하게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를 발표했다.

이런 짓을 벌이는 두 지배자들이 위령비 앞에 잠깐 고개 숙이는 것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는가? 원폭 피해자들도 참배에서 멈추지 말고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쟁 부르는 한미일 동맹

무엇보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원폭 피해자들의 평화 염원을 박살내려는 자들이다.

“압도적 전쟁 준비”를 하자는 윤석열

과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평화헌법을 없애려는 기시다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물론, “전쟁만은 안 된다”며 반핵·반전 운동을 벌여 온 일본의 수많은 원폭 피해자들(일본인과 재일 한인)과 한 편일 수 없다.

지난해 3월 기시다는 주일 미국대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일본인) 위령비에 헌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바로 그 히로시마 원폭의 투하 당사국이자 지금도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런 말이라니!

이번 공동 참배 때도 윤석열-기시다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의 핵 위협이 끔찍한 제국주의 야만인 짓은 맞다. 그러나 그 상대방인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는 야만이 아닌가? 윤석열-기시다는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강화를 원할 뿐 진정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전쟁동맹강화를 위해 만나는 한·미·일 지배자들에게 반기를 들어야 한다.

김승주



사진: 위키미디어

미국은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나

1945년 8월 6일 오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일순간 도시의 3분의 2가 지구 표면에서 쏠려 나갔다. 35만 명이 거주하던 이 도시에서 사망자가 14만 명에 이르렀다. 조선인 5만여 명도 피폭됐고, 그 중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또 한 발의 핵폭탄을 투하했고, 도시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미국 국가가 자행한 야만적 대학살이었다.

미국은 당시 핵폭탄 투하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일본의 결사항전으로 인한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전쟁을 지속할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 일본의 항

복이 임박했다는 것은 당시 미국·영국 등 연합국 지배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지된 사실이었다.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썼다. “일본의 운명이 핵폭탄으로 결판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실수일 것이다. 일본의 패배는 첫 폭탄 투하 전에 확실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7월 18일 자 자신의 일기장에 소련이 8월 15일 일본에 선전포고할 것이고, 소련이 참전하면 “일본은 끝장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핵폭탄은 미국이 소련 군대의 도움 없이도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음을 의미했다.

“만약 원폭 투하가 일본 패전의 결정적 요인이려면 미국은 사악한 전쟁을 끝낸 구원자이자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소련의 개입이 결정적이

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미국이 4년 동안 끝내지 못한 태평양 전쟁을 소련은 며칠 만에 끝냈고, 이에 따라 전후 소련의 위신과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게 된다.”(《핵과 인간》, 정육식)

즉,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는 미국의 힘과 권위를 전 세계에, 특히 소련을 상대로 과시해 전후 질서 형성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핵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돼 아비규환이 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소련, 영국과 전후 세력권 분할을 두고 협상을 벌일 포츠담 회담(1945년 7월 17일) 전에 핵폭탄 개발을 완성해야 한다고 개발자들을 압박했다.

이런 행동은 미국 지배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담지자인 양 구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위선인지를 보여 준다.

일본 핵폭탄 투하에는 트루먼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루먼은 일본인을 “짐승”으로 비유할 정도로 아시아인을 멸시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임을 부각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겨운 일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재앙은 주요 강대국들이 벌인 제국주의적 전쟁이 낳은 비극이었고, 일본 국가는 바로 그 전쟁의 주요 행위자였다.

그 전쟁 내내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 혹독하게 착취당하고 총알받이로 내몰렸다. 동아시아 민중은 일본 군대에 식민 지배, 약탈과 학살, 강제동원 만행의 피해를 당했다.

히로시마 폭격 소식을 듣고서도 일본 지배자들은 일본 국민에게 사실을 ▶ 13면으로 이어짐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현재 한국인 가사노동자 월급은 보통 300만 원 내외,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 원 중후반대다. 맞벌이 부부 한 쪽의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보통의 여성들은 ‘경단녀’가 될지, 이 악물고 버텨야 할지 기로에 선다. 도움이 더욱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 가사노동자 고용은 언감생심이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사회서비스(노인·아동·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지원을 늘려 왔다. 그럼에도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언제나 개별 가족에 뉘었다. 국가 지원은 필요에 비해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조차 대부분 시장적 방식으로 제공됐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아픈 사람, 아이 등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노동계급·서민 가정은 언제나 전쟁터가 되곤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이런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를 지배계급이 비틀어 일부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배계급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에 더 많이 끌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가족 내 여성에게 떠맡겨진 돌봄 부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 지배계급의 일부는 값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자본가들의 경제지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 왔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육아비 치솟는데 외국인 도우미 도입 미적당다”며 정부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여러 번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최근 사설에서 조정훈 법안을 지지했다.

비틀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적극 도입해 왔다. 이주노동자 도입에 소극적이던 일본도 최근 저출생의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 가사서비스 시장이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요인으로 동남아시아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나,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 고임금 일자리로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 등 때문에도 지배계급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지난해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화가 시작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화하자 서울시와 정부가 도입에 나선 것이다.

열악한 조건 때문에 최근 국내 가사노동자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 수도 크게 줄었다.

정부·서울시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은 그나마 있는 돌봄 공공성도 공격하고 있다

해서 조정훈 법안과 달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기로 악명 높다.

자본가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는 데에 있다. 돌봄 부담에 짓눌려 고통받는 여성들, 나이 들거나 장애를 얻어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래서 (돌봄 제공자가 내국인든 외국인이든) 질 좋고 무료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고 가능함에도, 이런 방향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은 그나마 있는 돌봄 공공성도 공격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긴축과 대규모 부자 감세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예산은 더 위축됐다. 2023년 예산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모두 전년 대비 20퍼센트 가까이 삭감됐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문제인 정부가 공약한 사회서비스원은

후퇴를 거듭해 껍데기만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은 이조차 부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예산이 100억(전년도 예산의 30퍼센트) 삭감됐고, 서울시를 포함해 여러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역시 돌봄을 시장에 내맡기고, 개별 가족과 이주노동자가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경력 단절보다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쓰는 게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열악한 일자리라도 찾아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반대하긴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는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돌봄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질 좋은 공적 돌봄을 위해 여성과 남성,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한다.

성지현

이 기사를 읽은 뒤 본지 웹사이트에서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를 읽으세요.

▶ 12면에서 이어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즉각 항복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다급해진) 소련의 참전 소식을 듣고서야 ‘종전’을 선언했다. 일본 지배자들에게 평범한 자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포의 균형’?

불행하게도,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은 (이번에는 한편이 돼) 동아시아 지역을

또다시 긴장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이 여기에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 협력과 군국주의 강화는 더 큰 재앙을 예비할 뿐이다.

히로시마 이후 70년은, 핵무기가 결코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은 뒤이어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 등 더 위험천

만한 무기 개발을 추동했다. 냉전하에서 미-소 간 핵 경쟁은 쿠바 사태를 비롯해 몇 차례 핵전쟁 위기로 이어졌다.

오늘날 주요 강대국들이 가진 핵무기는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보다도 양과 질 모두에서 더 커졌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기항시킨다는 전략핵잠수함의 최대 핵무장력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핵폭탄의 5000배가 넘는다고 알려졌다.

또한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

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핵무기를 가진 국가도 더 많아졌다.

이것은 어느 한 편에서 벌어지는 국지적 충돌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대적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끔찍하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미·중 간 갈등의 주요 무대인 동아시아와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현주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국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고, 간호사의 활동 영역에 ‘지역사회’가 새로 들어갔어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을 따른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460호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를 보시오.)

그런데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공약 파기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고자 간호법으로 생길 변화를 과장하며 지역 간 갈등을 핑계 삼았다.

윤석열이 간호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는 민주당과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쟁투의 맥락이 있다.

그뿐 아니라, 재정 긴축과 복지 삭감이라는 맥락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양국법 개정안 거부도 같은 맥락이었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에 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우려 하는 듯하다. 상당수 노인과 그 가족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입원보다 그런 방식이 더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전임 문재인 정부조차 그 비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이견은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색을 크게 낼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사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내용은 간호법에 거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많은 간호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간호사들의 노동조건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 등에서 간호사들이 한 중요한 구실을 말로만 칭찬했을 뿐 정작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그런 간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선언적 수준에서나마 인정한 결과로 여겨졌는데 윤석열은 그조차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잘 조직된 간호사들이 간호법 시행 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5월 19일 간호사·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간호법 거부권'에 항의했다

회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싫을 것이다. 그로 인해 노인 돌봄에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 돌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간호법의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을 제정한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서민층 노인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23년 노인 돌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립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2023년 사업비도 전년보다 43.8퍼센트 줄었다.

노인 요양서비스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이 대거 투입

되고 있지만 기관의 99퍼센트가 민간업자이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고 질도 낮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가뜰이나 시장화된 의료·요양·돌봄을 더한층 시장화(“서비스 산업화”)하려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보험회사들의 요양시장 진출을 돕고자 시설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는 민간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수익성 논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시설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는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시설 이용자들이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 대부분에는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다. 인력 배치 기준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있는 요양시설이 60퍼센트가 넘는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와 돌봄 인력이 충분히 배치

돼야 한다. 이것은 공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가능하다.

노인에게 양질의 의료·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려면, 복지 삭감에 반대하며 보건의료와 돌봄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이 성장해 복지에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해야 한다.

간호사들의 분노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간호법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제도법’이라 비난했다.

공약을 파기한 자들이 사과는커녕 간호사들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한 것은 간호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

간호사들은 5월 1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이고, 5월 19일 광화문에서 4만~5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많은 간호사가 연가를 내고 참가했고 간호대 학생도 많이 왔다.

간협의 준법 투쟁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병원과 의사의 지시로 진행돼 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의사 부족 등으로 간호사들은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업무도 많이 해 왔는데, 특히 ‘PA간호사’(진료 보조 간호사)가 투쟁에 얼마나 참여할지 주목받고 있다.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 데, PA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아 고발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등은 PA간호사 문제 해결(제도화)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 등의 반대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간호사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간호사들이 간호법뿐 아니라 자신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요구들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투쟁하기를 바란다.

정진희

▶ 16면에서 이어짐

프랑스 나치, 파리에서 가두 행진하다

나치들의 행진은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대한 광범한 논의를 촉발했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르펜을 파시스트로 보지 않는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연합이 승리하더라도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된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 분명 사실이다.

르펜에게는 아직 대중적 거리 운동이 없고, 지배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말살할 정권에 도박을 걸 생각이 아직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합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살짝 다른 마크롱’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르펜은 무슬림과 이민자들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가혹한 법을 적용하려 들 것이다.

르펜은 경찰의 면책 범위를 대폭 늘리고 노동조합의 힘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질 것은, 최근 파리에서 행진했고 “아래로부터” 파시즘 강령을 실천하려 하는 그런 거리 깡패 조직들이 르펜의 집권으로 더 대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고약한 위험

그런데 르펜의 이런 고약한 위협을 지적하면, 프랑스 좌파 일각에서는 마크롱에 맞서는 것만이 실질적인데 괜히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본다.

급진적 잡지 《프뤼스트라시옹》은 최근 한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마크롱의 정책은 오늘날 유럽에서 집권 중인 여느 극우 정부에 견줘 더 잔인하고 더 권위주의적이다. 이주민 혐오적이기는 극우 정부들과 매한가지다.”

“독재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파시즘 요소를 품고 있는 고전적 극우 정치 속에서 살고 있다.”

마크롱은 연금 개악을 통과시키려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분명 마크롱은 경찰 폭력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이 쟁취했던 사회적 권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마크롱을 “현존하는 파시즘”으로 보면 중요한 사실을 여럿 간과하게 된다.

만약 노동자들이 연금을 둘러싼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 폭력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운동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탄압한다. 반면 마크롱은 노조 관료들에 의지한다.

파시즘은 선거와 의회를 없애버린다. 반면 마크롱이 대규모 시위에 양보하기를 거부하면서 드는 뻔한 명분은 자기가 대선에서 승리했고 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크롱과 파시즘 사이에는 관계도 있다.

데이비드 비덤은 저서 《파시즘에 직면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서 파시즘이 의회 시스템 내의 인종차별적 주류 우익과 두 가지 형태로 관계 맺을 수 있다고 썼다.

그 두 가지는 “계승과 동시적 상호작용”이다. “계승”이란, 마크롱이 이민자들과 무슬림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권리를 가차없이 빼앗고 경찰의 야만적 행위를 지지한다고 해도 르펜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르펜의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짜퉁이 아니라 원조를 선택하라”고 파시스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크롱은 르펜에 맞설 방벽이 아니라 르펜의 길을 예비하는 노릇을 한다.

“동시적 상호작용”이란, 마크롱은 자신의 인종차별을 파시스트들이 지지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더 대담하게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시스트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우익들에게 자신의 축수를 뻗힌다.

르펜은 언제나 이런 전략을 추구해 왔다. 최근 국민연합 의원 두 명이 초당파적 성소수자 반대 조직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위키즘[정치적 올바름을 비하하는 멸칭]의 극단적 오용이 우리 문명을 파괴하는 이데올로기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에 맞선다.”

언젠가 마크롱의 프로젝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일부는 파시즘과 협력하거나 더 나아가 파시즘 운동에 가담할 수 있다.

두 가지 요소

르펜을 물리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파시즘 반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결집한 공동전선이다. 5월 1일 르아브르에서 르펜의 연회에 맞서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조직했던 것



“르펜을 추방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5월 1일 르아브르에서 열린 파시즘 반대 집회

이 그 비슷한 사례다(하단 사진). 둘째, 계급투쟁을 가속화해서 노동자들이 국민연합과 결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국민연합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르펜의 대선 승리를 점치는 여론조사들도 술하게 많다.(차기 대선은 2027년에야 잡혀 있지만 말이다.)

그 이유는, 저항이 수위가 높아도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350만 명이 행진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위기의 시기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 좌파와 우파가 모두 성장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적 개입과 노동자 투쟁의 강력함이다.

3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사람들에게 시위가 “더 강경해져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2022년 대선 때 좌파 후보 장뤼크 멜랑송에 투표했던 사람들 중 63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르펜에 투표했던 사람들 중 63퍼센트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르펜 자신은 시위의 확산, 전투적 파업, 도로 봉쇄 등에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만약 무기한 총파업이 벌어졌더라면 노동자들의 힘도 보여 주고 르펜과의 긴장도 커졌을 것이다.

국민연합을 지지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르펜이 기업주들의 후원을 받고 있음을 목도했을 것이다.

그런 파업은 연금 등의 쟁점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었을 지금도 그렇다.

그런 투쟁은 인종차별을 악화시키는 아주 반가운 효과도 낼 것이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은 계급투쟁의 일환인데, 차별은 마크롱과 기업주들에 맞서 이뤄야 할 단결을 해치기 때문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협력하고 있는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 단체 ‘계급 독립성’은 이렇게 말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파시즘이 전진을 꾀하는 두 전선, 즉 경찰국가·인종차별·군국주의 강화에 맞서는 것과 자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모두에 맞서는 것이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마크롱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마크롱에 맞선 투쟁이 강력해질수록 르펜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민족이라는 신화나 인종차별을 극복하도록 계급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인종차별 반대는 노동계급의 대규모 공세의 일부이자 핵심 주장일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 출처: Comité du 9 Mai

5월 초 파리에서 나치가 벌인 가두 행진은 끔찍한 경고 신호였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김버가 파시즘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파시즘에 맞서고 파시즘을 찌그러뜨리고 물리칠 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최근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의 나치들이 파리 거리에서 공공연히 행진한 장면은 프랑스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것이었다.

이 행진의 주최는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아니었다(많은들 간과하지만 국민연합도 명명백백한 나치 정당이다). 그날 행진한 무리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 무리의 주변적 폭력 집단들이었다.

그들은 행진을 마무리하며 “유럽, 청년, 혁명”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 구호는 파시스트 학생단체 연합방어그룹(GUD)의 표어다.

행진이 끝나고 “음악의 밤”이라는 나치 행사가 이어졌다. 파시스트들은 거짓 명칭을 걸고 그 행사를 조직해 시몬 베유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회관의 이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시몬 베유를 기리려는 취지에서 붙인 것이다.

그 행진은 파시스트들의 폭력이 점차 거세지는 더 큰 흐름의 일부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극우·파시스트 활동가들이 좌파 시위대·단체를 공격한 일이 3월 마지막 2주 동안 15건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시위대의 일부를 공격하거나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습격한 것 등이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징이 박힌 장갑을 낀 파시스트 무리가 한 학생의 코뼈와 턱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다. 그 밖에도 칼과 쇠곤봉, 심지어 총까지 동원해서 공격한 일도 있었다.

5월 11일 프랑스 서북부 도시 생브레뱅레팡에서는 시장인 야닉 모레즈가 사임하고 도시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었다.

모레즈는 파시스트들의 거듭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모레즈의 집에 화염병이 날아오기도 했다. 모레즈가 생브레뱅레팡에 난민 지원 시설 설치를 옹호

했다는 이유로 그런 공격이 벌어졌다. 모레즈는 시장 사임을 선언하며 “국가가 수수방관했다”고 규탄했다.

파시스트 단체들은 몇 년 동안 잠잠했지만 최근 되살아났다. 그런 단체들로는 [앞서 언급한] 연합방어그룹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적이고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프랑스의 행동’, 국민연합 친화적인 ‘코카르드 학생회’ 등이 있다.

히틀러식 경례

파리 행진이 너무도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와 르펜, 노동조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르펜은 이번 행진을 비난했다. 자기 이미지에서 “독소를 빼내”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는데, 바로 그 연장선 상에서 그런 것이다. 르펜은 히틀러식 경례를 하고 물리적 공격을 미화하는 세력과 선을 그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르펜은 경찰이 복면 시위대를 단속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그 속내는 경찰이 그런 권한을 좌파에게 휘둘렀으면 하는 것이다.

국민연합은 자신들이 파시즘 전통과

결별했다고 포장하지만, 국민연합이 거리 캠페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은 번번이 드러난다.

르펜과 한때 긴밀하게 협력했던 옛 연합방어그룹 회원 두 명(악셀 루스토, 올리비에 뒤게트)이 이번 나치 행진에 참가했다.

프랑스 국가의 초기 입장은 그 행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태도를 급히 바꿔, 앞으로는 그런 모임을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르마냉은 ‘프랑스의 행동’ 유관 출판물에 글을 실은 적이 있고, 어쩌면 그들의 여름 캠프에 참가했을 수도 있다.

다르마냉은 다가올 선거에서 르펜과 붙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위 진압 병력을 훨씬 더 단단히 무장시키고자한다.

노동조합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5월 13일에 ‘프랑스의 행동’에 맞선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집회 날짜를 ‘프랑스의 행동’ 집회와 같은 날로 잡지는 않았다.[즉, 맞불 집회가 아니다.]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5월 24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인식 〈노동자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bit.ly/052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